

제180호

발행인: 신현규
발행일: 2014.09.24



발전노동자

- ☐ 민주노조 사수
- ☐ 전력산업공공성 강화
- ☐ 생존권 사수
- ☐ 경영평가 무력화
- ☐ 해고자 원직복직

공공기관 정상화는 서막에 불과했다!!

지난 금요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경제혁신 특위 공기업개혁분과’ 주관하에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일반적인 정부 공청회가 그러하듯이, 이번 공청회 역시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20여 차례 진행된 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의지를 피력하는 자리였다. 조만간 발표 예정인 최종보고서 역시 공청회 자료의 내용과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공청회

‘국민 눈높이’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2014년 9월 19일 (금),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

새누리당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만경영 개선 등은 지엽적인 문제로서 공공기관 개혁의 목표달성을 위한 근본대책으로 미흡하다.”고 주장하면서,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공공기관혁신위원회로 개편하고 총리실로 이관(한시적으로 대통령직속 방안 검토)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그간 진행해 온 공공기관 정상화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엇인가를 위해 더 큰 권한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자료집 전반부에서는 우선 공공기관의 부채현황과 구체적 문제점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새누리당의 집권기간 동안에 야당의원,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이 문제제기 했던 내용들을 짜깁기 한 데 불과하다. 발전의 경우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 및 퇴직직원 재취업 창구 악용 사례’와 ‘해외 투자 손실’등이 문제점으로 소개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정책 방향은 제2장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그들은 주요 공기업을 4개(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 LH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로 분류하여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온갖 미사여구가 동원되어 이르는 결론은 경쟁촉진·독점구조 개선·시장개방·민간개방·구조조정·기능조정·주식상장 및 지분매각·경영권 매각·변경 등이다. 발전산업과 관련해서는 ①발전자회사의 해외투자를 축소, ②한전의 부채 감축을 위해 발전자회사 상장 및 지분 매각 추진, ③개 발전

회사를 3개 회사 체제로 개편(필요시 지역본부 형태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 검토) 등이 중요한 정책 방향으

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경영의 자율과 책임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내부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는 ①호봉에 따른 자동승급 대신 성과에 따른 승진과 연봉제 도입, ②생산성에 걸맞는 보수체계 도입하여 차등폭 확대, ③내부평가와 연계한 퇴출장치 마련, ④임금 peak제 도입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기본 정책임에도 굳이 이번 공청회에서 언급한 것은 노동자를 개별화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 민영화의 저항을 최소화시키는 수단으로서 ‘성과연봉제’와 ‘임금체계개편’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다.

발전노동자에게는 2002년 이후 최대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무엇인가? 만반을 생각하고 천번을 토론해 보아도, 역시 제대로 된 단결과 제대로 된 투쟁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단결하고, 제대로 투쟁할 수 있을 것인가? 답은 이미 아래의 서신에 나와 있다. 발전노동자들의 올바른 선택이 남아 있을 뿐이다.

정부와 회사가 아무 거리낌없이 약속을 뒤집고 추가 항복을 요구하는 것, 5개사노조 집행부가 직권조인을 반복하고 급기야 이제는 상황 설명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측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은 조합원들이 만만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침묵과 외면은 더 큰 재앙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정부와 회사는 지금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성과형 임금제도, 통상임금 축소 등을 종합적으로 묶은 임금체계개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복지축소와 퇴직금 삭감 동의의 과정에서 5개사노조가 펼쳤던 논리대로라면, 이 또한 거부되어서는 안되는 요구입니다. 임금체계개편까지 정부와 회사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발전노동자의 삶은 상상 이상으로 척박해질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권한을 주어도 행사하지 않는 자들에게 더 이상 권한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가끔 능력이 부족하고 실수가 있었을 지언정, 결코 조합원을 배신한 적 없고, 한 번도 직권조인하지 않았던 민주노조의 전통을 발전노조는 여전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움츠린 어깨를 펴고 당당한 발전노조 조합원이 되고, 발전노조가 각사의 과반수노조가 되어 교섭권을 확보한다면, 저들의 폭주를 충분히 멈출 수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투쟁!

<9월 18일자 발전노조 위원장 서신중 발췌>

발전노조 성과급균등분배 시행

‘성과경쟁을 부추기는 경영평가를 무력화시키고, 개인평가와 연봉제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제14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성과급균등분배 투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남동·남부분부만 본부별로 시행
 - 동서·서부·중부는 경영평가 D등급으로 성과급차등지급×
2. 9월 성과급중 사업소평가에 따른 차등지급 성과급만 적용
3. 소득세 역차별 방지를 위해 균등분배 제외율은 35%
4. 해당 조합원들은 급여명세서를 지부장에게 제출
 - 2013년 12월분, 2014년 9월분
5. 사업소 이동/휴직기간 등은 일할계산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시행 일정

- ☐ 10/02(목) 선거 공고
- ☐ 11/02(일) 후보자 등록 공고
- ☐ 11/08(토) 후보자 확정 공고
- ☐ 11/26(수) 투표기간, 투표소, 투표사무원 공고
- ☐ 12/03(수) 발전노조 투표 1일차
- ☐ 12/04(목) 발전노조 투표 2일차
 - 투표 마감후 각 지역본부로 투표함 이송
- ☐ 12/09(화) 민주노총 전체 투표 마감 및 개표